

의안  
번호

1078

【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】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9. 5.(금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9. 11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9. 17.(수)

### 2. 폐지이유

- 가.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거 지자체 조례의 부과기준대로 시행되어 왔음
- 나.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나고, 당초 취지인 결핵환자를 위해 수수료가 사용되지 않고 있음
- 다.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해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,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

### 3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」 폐지

### 4. 관련법령

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 제3항

## 5. 검토의견

-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취지는 수수료 징수 목적 보다는 환자로 하여금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을 통해 치료 효율을 높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짐
- 결핵관리사업이 2011년 4월부터 민간공동협력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결핵환자가 병·의원 이용시 입원비 및 생활보호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본인 부담금이 아주 낮아지긴 했지만 결핵환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실정임
- 비록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적다고는 하나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
-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조례폐지 추이를 보면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(운영)하여 오다 2011년 이후 부산, 대전, 울산 남구 등 11개 시도(구군)에서 본 조례를 이미 폐지하였으며,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따라서,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

## ※ 관련법령

### 【결핵에 방법】

**제18조(결핵환자등의 의료)**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(의사만 해당한다)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